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038
----------	------

발의연월일 : 2020. 12. 2.

발 의 자 : 진선미 · 박상혁 · 문진석
조오섭 · 진성준 · 천준호
허영 · 김윤덕 · 소병훈
박영순 · 김교홍 의원
(11인)

제안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해지원사업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소지 이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자의 재활 및 생계유지를 보조하는 경제적 지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금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본인에게 알려줌으로써 피해지

원사업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효율적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30조제3항)

- 1)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경제 현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관련 정보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
 - 2)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소지 이전 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업무 수행을 도모
-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대상자의 재할 및 생계유지를 보조(안 제40조제2항 신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3. 여성가족부장관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1. ~ 3. (생략)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1. 행정안전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3. 여성가족부장관 4. ~ 6.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생략) <u><신설></u>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